

2009년 9월 역사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일본 민주당 내각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 라는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그간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관료가 주로 사용하던 ‘협력’ 이니 ‘연대’ 니 하던 단어에서 ‘공동체’ 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다. 학자나 지식인의 담론에서 쓰이던 공동체라는 단어가 공식화된 타이밍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후 일본의 표준적인 지역 범주였던 아시아-태평양, 즉 ‘아태’ 가 ‘동아시아’ 로 좁혀온 과정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진전되어 오던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의 설정이 민주당 집권 이후 보다 본격화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구상을 본격적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기 이전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어 탄생한 칸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정치적 불안으로 내치에 주력하면서 뚜렷한 지역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집권 초기, 오랜 자민당 집권 시기 공고했던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아시아 중시 외교로 선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중요성과 중국 견제라는 모멘텀은 다시 아태로 전략적 시선을 옮기도록 요구하는 듯하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확장적 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이 날로 더해가는 이 지역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너머 외곽으로 나아가

야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게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구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상당한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의 대재앙, 뒤이은 원전사고의 공포는 일본이 역내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국내문제에 몰입하여 대외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점차 네트워크화되어 가는 21세기 국제관계 속에 탈아입구(脫亞入歐)니 탈구입아(入歐脫亞)니 하는 식의 19세기적 이분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관건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구상을 어떻게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범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와 조화시키며, 또한 그러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새롭게 개혁하느냐에 일본의 외교적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연구원에 2009년 만들어진 일본패널 연구진들의 첫 작업이다. 참여 교수진은 독회를 시작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연구하였다. 처음 세 개의 장은 일본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전반적인 정책 및 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다음 네 개의 장은 안보, 금융, 무역, 문화 등 기능적 측면에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두 개

의 장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각 주제별로 독립된 원고들이지만 논의의 전개 상 서론 부분이 겹치는 문제는 불가피하였다. 편집과정에서 일부 덜어내기는 하였으나 각 장의 완결성을 위해 구체적 정책과 협력체 소개가 반복되더라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독자에게는 반복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관심에 따라 각 장을 읽는 경우는 이 방법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번의 패널 모임에 참석하고 원고를 모으는 과정에서 애써준 동아시아 연구원의 서상민 박사에게 감사한다. 또한 연구진의 원고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까지 편집과 출판을 책임지고 수고해 준 신영환 연구원에게도 감사한다. 한국 학계에서도 중국연구에 비교하여 일본연구가 다소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본 연구에 이어 더욱 창의적인 일본연구가 본 패널 참여 교수진들에 의해 계속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2011년 3월  
한상일 · 이숙종